

# 여야, 대정부질문서 ‘난방비 폭탄’ 책임 공방

여 “文 정부 탓, 인상요청 목살”  
야 “물가폭탄 국민고통 사과를”  
한덕수 “황재세 도입은 부적절”

여야는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폭탄의 책임 소재를 놓고 전·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공요금 폭등과 민영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대정부 공세를 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난방비 인상 선별 지원에 대해 “중산층은 부담이 안 되나”라며 택시비, 버스비 등도 오른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물가 폭탄으로 국민 고통을

받는 것에 사과하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요구하자, 한 총리는 “인기위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민에 참을 것은 참으라 말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엄청난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난방비와 전기 요금 등 각종 참사와 폭탄으로 국민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윤 정부 국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민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 정부 탓, 탈원전 탓으로 책임 회피에 만 급급하고 있다”며 현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을 질타하며 “국제가스

비 폭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예측 가능했음에도 현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탈원전 탓이라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발전량이 오히려 약 30% 증가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요금인상 원인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쌀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현실과 식량안보의 중추인 쌀생산 농가의 안정감 유지 측면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전체 농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서영교 의원은 “2022년 1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를)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불응했다”며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조작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행위를 했을 때 검찰에서 소환을 하면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나”라며 “왜 안 나갔을까. 그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가스비 인상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문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후과란 주장을 전개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난방비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요청 목살”을 꼽으며 전 정부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국제 가격이 오를 때 요금에 조금씩 적절히 반영했다면 요금 폭탄

이 없었을 거란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금와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후안무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황재세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다.

한무경 의원은 “야당 대표 중심으로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하고 있고, 재원으로 정유사들에게 황재세를 걷자고 까지 했다”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사회적 취약계층 쪽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황재세는 아주 신중히 접근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나라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이재명, 10일 오전 11시 檢 출석

‘대장동 의혹’ 추가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와 관련해 10일 출석하기로 했다. 변호인만 대동해 출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추가 조사 관련 10일 최고위원회 후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주중엔 당무, 국정에 집중해야 해 주말 출석하

려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 고집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 대표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이라며 “정부여당이 민생을 나 몰라라하고 야당에 그 역할을 떠맡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서삼석 “농작물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는 국가책임 방기”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7일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조치는 사업 취지와 위배돼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농업 분야 난방비, 전기요금 폭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에서 지원 정책마저 뒤흔드는 일이 국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농촌의 현실이 무시된 한전의 처사는 시급히 재고되어야 하며, 농산물의 정의 규정에 얽매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다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의 농산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소병철 ‘유가족 회복 지원 전담공무원 지정’ 법안 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7일 사회적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참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유가족의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행동매뉴얼을 마련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유가족 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 및 심리적 안정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배상금·지원금·보상금 신청, 장례절차 등의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 유가족들의 안전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유가족의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유가족 의견이 존중되는 피해 회복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 尹 “‘지진 피해’ 튀르키예에 구조인력 급파”

“우리 자유 지켜준 형제의 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터키)에 대한 긴급 지원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4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으로 사상자가 얼마나 더 발생할지, 아마 더 큰 피해

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50년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대규모 파병을 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형제의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라며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를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사건은 한 국가의 재난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이 재난을 돕고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국제구조대 60여명 등 정부 차원의 구조단을 군 수송기를 이용해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또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긴급 의약품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튀르키예 당국과도 긴밀하게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안철수 “수도권 탈환”… 김기현 “당정조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비전 발표로 표심 호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7일 비전발표회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두고 이해득실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비전발표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후보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기여했다”고만 언급했다. 대신 발언 시간 대부분을 수도권 승리 전략에 할애하며 “청년 지지율, 중도 지지율, 수도권 지지율에서 제 경쟁자와 비교해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윤심 후보’로 꼽히는 김기현 후보는 “당·정 조화로 국정 에너지를 극대화시키

고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윤심을 내세웠다. 그는 “이 당, 저당을 기웃거리지 않고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이라며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로 주목도가 높아진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대통령 전당대회 불개입 당헌 신설을 주장하고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표현 자체를 요구한 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윤심과 대립각을 세웠다.

조경태 후보는 “야당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법률안을 제출했다”며 “국민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한다. 내가 앞장서서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후보는 ‘대통령실 당무개입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 모든 정치인의 대통령이라 누구를 가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윤 반윤 이게 아니라 윤 대통령과 통하는 통윤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후보는 후보간 네거티브에 대해 “선의의 경쟁하고 자기의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 네거티브가 심한 게 사실이다. 선관위 비대위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8-9일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방식의 예비경선(컷오프)을 치른 뒤, 10일 당 대표 4인, 최고위원 8인, 청년최고위원 4인의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한다. 김선욱 기자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jnilbo  
 광주사람들 인스타그램 @peopleofwangju  
 스낵뉴스 인스타그램 @hiphot\_snacknews